

# 쇠고기·감귤·콩도 소득직불금 지원

## ■ 정부 FTA 후속 대책 의결

### 농·수산업 폐업지원금도 지급 제조·서비스업 경영자금 지원

쇠고기와 감귤,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한미 FTA체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소득보전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체에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투자 자금 등 자금지원은 물론,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인력·기술·관로 및 입지정보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농촌·농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열린 경제정책조정

회의에서 한미 FTA 후속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농·수산업 피해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금 지원=정부는 우선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과 관련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 대상이 현행 키워와 시설포도에서 쇠고기, 감귤, 콩 등으로 확대된다.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수산업에서도 한미 FTA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우려되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의 품목을 소득보전직불금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수산업에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현행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동시 추진=정부는 농·수산업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이들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를 유도하고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한 우수 축산브랜드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국경제 워크숍'을 주재, 한미 FTA 타결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 FTA 농어업 특별법 주요내용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대상품목
소득보전직불 (2010년까지)	수입증가로 농산물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폭 80% 수준 소득보전 • 농업·시설포도·키위, 쇠고기·감귤·콩 등 지원 추가 예정 • 농민·직접 5년간 평균가에서 최저·최고치 뺀 3년간 • 평균가의 80% • 수산업: 기준 별도 마련	• 농업·시설포도·키위, 쇠고기·감귤·콩 등 지원 추가 예정 • 수산업·고시없음
폐업지원 (2008년까지)	• 농업·폐업·양도시 과거 37년간 순수입액 보상 • 수산업 - 면허허업: 평균수익액/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전손가액	• 농업·시설포도·키위·복숭아 • 수산업·고시없음
경쟁력제고	합정·합으로 피해 발생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 위해 보조 또는 융자	농림·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원에 부문에서는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신제품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산업에서는 노후 선박설비 교체, 설비 현대화, 공동운반·판매·마케팅 등을 통해 명태, 민어 등 원양어업 품목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조업·서비스업 경영자금 지원 및 컨설팅=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한

미 FTA 체결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서비스업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FTA의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서비스업종이나 경마장, 골프장, 오락장 등 사행성 서비스의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 무류 과이라운드(UR) 등으로 이미 개방된 업종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에 사업전환

자금 융자, 컨설팅, 유류설비 매각 앞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무역조정지원법이나 사업전환촉진제도 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의 지급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서비스업 미국 진출 총력 지원=정부는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산품과 서비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 분야의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픽업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와 전략적 기술 제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도 해소해줄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盧대통령 “비준 만만치 않을 것”

“구체적 수치로 FTA보완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피해산업 분야 구체적 대책 등 구체적인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국회 비준을 위한 대국민 설득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을 통해 각 부처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한미 FTA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반대 여론 설득을 위한 국무위원들의 노력을 독려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피해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의 숫자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 수치를 갖고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 “FTA가 비준되면 이익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를 국민도 많다”며 “그런 국민에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보지 않도록 해줘야 하며, 나아가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회위부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FTA는 한 고비를 넘긴 했는데, 앞으로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흔히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준의 고비가 또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설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론자 설득을 위해 직접 토론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한총리 “FTA 문서 전면공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날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5월경 한미 양측이 체결하게 될 텍스트를 전면 공개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철저히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이같이 말하고, “이같은 공개로 모든 분들의 비평과 평가에 노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앞으로는 왜(FTA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하고 논의,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념적 반대, 정치적 반대는 타당하지 않으며, 내용과 대안을 놓고 따지는 토론의 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농산물 협상결과에 대해 “최대한 관세인하 기한을 확보했고 쌀을 제외하는 등 협상팀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앞으로 국가는(농가의) 피해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미국산 일본차 몰려오나

관세 철폐로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본차가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일본차인 도요타 렉서스와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3개 브랜드의 차량은 모두 일본 공장에서 생산된 ‘메이드인 재팬’(made in Japan)이다. 따라서 일본차 업체는 당장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한국시장 관세 철폐’라는 반사이익을 못얻을 것으로 보

이지만, 문제는 이들 업체 모두 미국내 완성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차 업체의 미국 현지공장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가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문제 등 여전히 고려해야 될 문제들은 남아있다”고 말할 것도 이를 반영한다. /연합뉴스

## 그랜저TG 58만원→53만원 뉴마티즈 6만4천원 유지

### 자동차세 3단계 단순화...지방세 1천억 줄어들 듯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국내 자동차 세제를 일부 개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1천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세(국세)에 속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일부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세제 개편은 한미 FTA 협정안이 2009년께 국회에서 비준된 뒤의 일이라서 당장의 세제 개편과 그에 따른 세부담 변화는 없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결과, 자동차 세제는 cc당 '800cc 이하 80원', '1천cc 이하 100

원', '1천600cc 이하 140원', '2천cc 이하 200원', '2천cc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에서 ▲1천cc 이하 80원 ▲1천600cc 이하 140원 ▲1천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세율구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 세율도 인하된다.

이에 따라 차종별로는 1천cc 이하인 뉴마티즈(796cc) 신차의 자동차세는 종전과 같이 6만4천원으로 유지

되는 등 1천600cc 이하 차종의 세부담은 별다른 변동이 없지만, 쌍과테2.2(2천188cc) 신차는 48만1천원에서 43만8천원, 5년짜리 중고차는 43만3천원에서 39만4천원으로 낮아진다.

또 그랜저TG(2천656cc) 신차는 58만4천원→53만1천원, 5년짜리 중고차는 52만6천원→47만8천원, 10년짜리 중고차는 35만원→31만9천원으로 각각 내린다.

아울러 미국산인 포드500(2천967cc) 신차는 59만3천원→53만9천원으로, 5년짜리 중고차는 53만4천원→48만5천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연합뉴스

**한미FTA 타결 후 자동차세 변화**

한미 FTA협정안 국회 비준 후(2009년)부터

**뉴마티즈**  
4810원 → 43800원  
신차가격: 352000원

연방: 22만1천원  
개년: 22만1천원  
\*5년: 20만1천원  
\*10년: 13만4천원

**SMS 2.0**  
1,990cc  
150000원

연방: 40만  
개년: 40만  
\*5년: 36만  
\*10년: 24만

**그랜저 TG**  
2,656cc  
250000원

연방: 58만4천원  
개년: 53만1천원  
\*5년: 47만8천원  
\*10년: 31만9천원

**에쿠스 3.3**  
3,342cc  
450000원

연방: 79600원  
개년: 66만4천원  
\*5년: 60만1천원  
\*10년: 40만1천원

**코라이슬러300c 3.5**  
3,518cc  
567000원

연방: 77140원  
개년: 70만4천원  
\*5년: 63만4천원  
\*10년: 42만2천원

\*종교차 개편 세액

**ROYALTY**

**“조유하는 순간 세상의 부러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코라이슬러 300c 3.5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 필암다이너스티CC 칩팅 및 경기보조원 모집 ◆**

**◆ 칩팅 모집 ◆**

**◆ 경기보조원 모집 ◆**